# 광주시 C-ITS 재공모도 유찰…사업 차질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

## 2-3개 업체 참여 조건 충족 못해 차일피일
## 市 "이달 내 마무리"…국비 반납 우려 제기

광주시가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의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또다시 유찰되면서 공모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총 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C-ITS 구축사업을 재입찰 공고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지난 3일 마감했던 첫 번째 입찰에는 참여의향을 밝힌 다른 업체가 있었으나 결국 입찰에 응하지 않게 되면서 A업체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이에 시는 재공모를 추진했으며, 최종 결과 2곳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또 다른 업체가 일부 서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적격'으로 정리돼 또다시 단독업체의 응찰로 무산됐다.

시는 본보가 보도한 '광주시 C-ITS 불공정 입찰 논란'(2019년12월17일자 1면) 지적에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유찰될 경우 다시 입찰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재공모마저 유찰되면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차질이 우려되고 국비 일부(20억원)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달 내에 공모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지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모가 큰 만큼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고려하지 않겠다"며 "혹시 평가점수나 공모지침에는 문제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다시 재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국고보조 공모사업인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은 올해 광주시와 울산시가 선정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4곳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참여율이 높지만, 광주시는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단독업체가 참여하면서 유찰됐다.

광주시 사업이 연이어 유찰된 배경은 타지역과 비교해 동일사업 실적 점수의 배점이 커 참여율 저조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017년 대전-세종, 2018년 서울, 제주 등이 추진 중인 사업이어서 동일사업 실적과 유사실적이 있는 업체가 다수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시범 및 실증 단계 사업이어서 동일 실적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C-ITS 사업은 도로망 확장, 차량간 통신환경 구축, 안전서비스 개발, 교통상황·위험정보 실시간 공유 등 차세대 자율 주행 교통서비스다. 지난해 서울과 제주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광주와 울산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받았다.

시는 시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250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도로에 C-ITS 전용 통신망(Wave), 상용통신망(LTE 또는 5G)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다이 기자

## 전남도, 하반기 도정 우수제안 수직정원 조성 등 17건 선정

전남도는 25일 "2019년 하반기 도정 우수 제안으로 '수직정원 조성', '칡넝쿨로 양파망을 만들어 미래 농산물 포장산업의 모델화' 등 1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시제안 분야에선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접수한 165건에 대해 1차 채택심사와 2차 등급심사를 거쳐 국민 제안 5건, 공무원 제안 3건을 최종 선정했다.

공모제안 분야에선 지난 9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전남의 미래발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블루 이코노미 콘텐츠 발굴' 주제 공모를 실시해 총 88건을 신청받았다. 1차 서면평가와 2차 경진대회를 거쳐 국민제안 3건, 공무원 제안 6건을 최종 선정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 소방관서 부당행정 대거 적발

광주 소방관서들이 구조·구급 활동 사후 관리, 예산·계약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2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동부소방서, 광산소방서, 소방학교 등 3개 기관 감사에서 모두 2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정 9건, 주의 9건, 개선 3건 등 행정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5명은 훈계하도록 했다.

동부소방서는 총액 2천200여만원 상당 공사를 3건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했다.

동부와 광산소방서는 교육, 병가, 휴직 등으로 일정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23명에게 방호활동비, 구조구급 활동비 총 58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광산소방서는 소방활동과 무관한 자원봉사,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소집 수당 600여만원을, 시의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7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다이 기자

**성탄절 소방대원 격려**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오전 목포소방서를 찾아 성탄절 특별 경계근무 중인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金지사 "국고 7조시대 효율적 예산 집행을"

### "도민에 혜택 고루 돌아가도록 해 행복시대 실현"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4일 "2020년 도정예산 첫 8조, 국고예산 첫 7조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 한분 한분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도정 목표인 '내 삶이 바뀌는 도민 행복시대'를 일궈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지난 1년 쉼 없이 달려온 결과 많은 성과를 낸 만큼 이제 우리 힘을 안으로 모으고, '원팀'으로 뭉쳐 도민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송년사와 신년사, 신년 인터뷰 등을 준비하다 보니 올해 생각보다 많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사상 첫 국고 7조원을 돌파한 성과를 잘 활용해 도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한다면 보람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소경제 선도 비전 선포,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등 관광 비전 제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이를 종합해 새 천 년 비전으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선포한 것은 전남의 방향을 적절하게 잘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밖에 도정의 여러 가장 기초적인 업무도 중요한 만큼 이 모든 것을 잘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 예타재조사 통과는 목포-부산이 2시간 24분, 광주-부산이 2시간 36분으로 가까워져 남해안 광역 경제권의 토대가 되고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기본 SOC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의 산업이나 관광 등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맞춰 대응할 것인지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관광 분야에서 전남 6천만 관광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상징적 의미일 뿐이므로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으로 체질을 바꿔 돈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김재정 기자

## 미세먼지 저감 '차량 2부제' 광주시의회 제외 요구 논란

### "공공기관 직원 아니다"…市 "환경부 지침 따를 것"

광주시의회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원들은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며,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차량 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일각에서는 '의전용'으로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에 시의회 의원들을 공공기관 직원으로 보고 2부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청과 구청, 산하기관, 공사·공단, 교육청, 학교, 공기업, 국립대 병원에서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기관 소속 직원과 업무용 차량은 홀수 일에는 차량 등록 번호 끝자리가 홀수 차량만, 짝수 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민원인·임산부·취약계층의 차량, 친환경 차·긴급차량·통근버스는 2부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원들은 의회 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회 소속 직원'으로 보고 2부제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의원들이 대상 기간에는 회기가 열리지 않아 의회 사무실에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2부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결론을 미루고 일단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원들을 공공기관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지침이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사회발전 대상'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23일 ㈔한국을빛낸사회발전대상조직위원회 선정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의회발전부문)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장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제8대 전반기 의회를 대표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라는 비전을 실현해오는 가운데 지난 1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공동발의한 '광주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가 단체부문 최고의 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 의장은 "제8대 의회의 당연한 역할인 시민의 충실한 대리자로서의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광주의 번영을 불러오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조직위원회는 매년 한 해 동안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활약한 인물들을 선정해 격려해오고 있다.

/김다이 기자